

예산안 처리 시한 '최장 기록' 깨나

여야 2+2 협의체 비공개 회동...R&D 예산 증액, 일부 의견 조율 새만금·특활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 이견 여전...막판 타결 주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했다.

여야는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56조 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간 협상을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공격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을 활용해 일부 복원하는 식으로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만금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 사업 증·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20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그날 안에 본회의를 열어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20일에도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이날 28일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상태다.

국회의원은 20일 내 처리 또는 협상 타결이 불발될 경우 28일 본회의를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산안 처리를 못 해도 타협만 이뤄지면 21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1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28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처리가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원내대표인은 기자들에게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면 시트지 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21일, 22일까지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가운데)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에 '당혹'

"검찰 공화국 아니면 안 일어날 일"...의원 수사 확대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19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수도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오경 원내대표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기소가 돼서 곧 재판에 들어갈 텐데, 사안들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과 관련된

의원총회 등 내부 논의를 할 생각이 없냐고 묻자 "해당 의원들의 이름만 거론됐을 뿐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이었고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 차원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의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확인된다면 그때 지도부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주류인 비명(비이재명)계는 당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다.

비주류 4인방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는 우리에게 수

사권이 없다며 도망 다니지 말고 관련 의원들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솔직하게 물어봐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하고 끊고 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표가 돈 문제로 구속됐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을 이렇게까지 탄압하고,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라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사건의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공화국이 아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견 못 좁힌 중대재해법·전세사기법

여야 '2+2 협의체' 회의서 결론 못내려...조만간 재논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의원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30여 분간 열었다.

이 원내수석은 회의 후 "오늘은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 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견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국회의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다.

여야는 '2+2 협의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관련한 양당 이견을 조율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합의에 이르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제품 용량·함량 변동표시 의무화법 발의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권리 보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 국회의원이 19일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킵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미 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



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시민 기만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촉진으로 시민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견과류·김·만두·맥주·소시지·사탕·우유·치즈·핫도그 등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올해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광록 기자 kroh@

서삼석 "농민 소득 안정·생산비 보장해달라"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농정 철학과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농업관측센터장 재직 당시 채소류 가격 관측 보고서와 실제 가격 차이가 컸음을 지적하며 수급 안정 역량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2016년 당시 발표한 농업관측센터의 관측 속보에 따르면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해당 연도 7월 3162원이었던 배추가격이 9월 7866원으로 149% 치솟았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농정에는 농민과 현장이 없다"며 "농민 소득 안정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작년



농업노동 시간당 소득은 8570원으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쳤다"며 "물가 상승을 농산물 탓으로 호도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계획 전문가로 알려진 후보자에게 지역 소멸에 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서 의원은 "현재 농산어촌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낙후되고 있다"며 "대도시가 갖고 있는 교통·주거·인구 문제와 전염병을 전부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농촌이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지역 소멸 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